

정책보고서 부문
(대학(원)생)

장려상 : 세계미래포럼이사장상

미래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서...

- 이전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중소기업 발전의 도약으로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공학 석사과정 허 준 홍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공학 석사과정 이 용 진

[요 약]

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며 세계 경제가 3%의 저성장 뒤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경제 발전 과정 중에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경제뿐 아니라 문화적·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보다 앞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격·기술경쟁력 있는 기업들(미래에 대기업이 된 기업들)을 국가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 국가를 확립하는 시기에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유익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룩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 발전은 현재 한계에 도달했고 저성장을 유인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유발하는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줄도산 리스크 증가, 중소기업 발전 저해, 대기업 경쟁력 약화 등이 있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빈부 격차의 심화, 복지 문제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산업의 단순화, 국내 기업 간의 핵심인력 유출로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이 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정성적(보고서 및 논문자료 등), 정량적 분석(Data 및 시뮬레이션 등)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이 위에 서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따라잡기 이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에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 분석되어 다음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 간의 협력 관계 - 모기업과 하청기업 간 분업적 협력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한 재정적 분권을 하여 유사 중복적 지원 및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다품종 소량 생산 촉진 - 21세기 시장 변화에 발맞춰 양적 생산이 아닌 질적 생산 체제로 바뀌어나가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R&D 분야 지원 - 선행 연구들을 통해 중소기업 R&D 분야 투자에는 국가 규모의 투자가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 되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에 알맞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소기업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 대출기간과 자금의 필요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역 금융기관을 활성화하며, 정부가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사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I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1950년의 우리나라의 수준은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비슷했으나 1960년대부터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바탕으로 2015년 GDP 규모 세계 11위, 2016년 1분기 수출액 7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눈부신 경제발전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기간산업의 활약이 컸다. 특히 삼성전자는 경향신문(2015.10.5)과 서울경제신문(2016.09.12)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4년과 2015년 ‘세계 100대 브랜드(100 Best Global Brands)’에서 7위를 차지했으며, 2016년 4월에 미국 <포춘(Fortune)> 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Global Most Admired Companies)’ 중 35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이용해 양적인 성장을 이어나갔으나,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며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많은 젊은이는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음을 풍자하는 이른바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를 부르고 있다. 한국경제 신문(2016.9.4)에 따르면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아시아 주요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며,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 봐도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빈부 격차 심화, 대기업 - 하청업체 간 원가 후려치기 문제 등과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뿐 아니라, 대기업 - 하청업체간 순환출자 문제, 중소기업 금융제도 지원의 문제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도 여럿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대기업과 관계되어 있는 만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에 대한 경제적, 윤리적, 국가적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II 연구 방법

1. 기존 연구의 한계

기존 연구는 한국경제 저성장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고 있다. 특히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성장¹⁾을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해결책들은 제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서 연구 자료가 정책으로 시행되기까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실무 경험이 적은 연구소에서 해결방안까지 제시되다 보니 실제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그 정책 자체를 수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구 자료에 대한 정책에서 시행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구자 본인들이 연구한 정책을 수정할 수 없게 되면서, 정책 시행자나 실무진들은 연구 자료를 ‘탁상공론’이라고 치부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정책 시행의 효율성 저해시킨다.

둘째, 제시된 해결방안은 오히려 해결방안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국한되게 하는 여지가 있고, 다른 해결방안으로의 탐색을 하지 않게 하는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연구 과정 중에 개발된 정책들이 뛰어난 정책 시행자들의 사고적 한계를 만들게 되고, 그 사고적 한계가 후에 정책에 대해 미미한 효과를 만들 수 있다.

2. 본 연구의 방향

위와 같은 한계로 인해 우리는 더욱 원론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노력했으며, 하나의 주장에 여러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또한 모색된 해결 방안들은 시행자들의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즉, 국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략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연구가 부족했던 문제들과 기존 연구에서 이미 다루었으나, 시행 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1) 2015년 IMF보고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온 낙수효과의 허상을 통렬히 반성했다.

III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문제 분석

1. 경제적 문제

가. 연쇄 도산 리스크 문제

특정업계를 리드하는 기업에 쏠림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하부구조에 맞물려 있는 기업뿐 아니라 리드하는 기업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8년 전 미국과 20년 전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미국의 대형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신용경색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발생했던 외환위기에서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의 부도 이후 한 다려 만에 3300여 개의 기업이 도산한 적이 있다.

1) 특정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 실태분석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재계 1위, 현대자동차가 재계 2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의 우리나라 명목 GDP의 합계 매출액 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은행’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7.5%, 2011년 18.2%, 2012년 20.7%, 2013년 22.1%로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이 2011년 18.2%, 2012년 20.7%, 2013년 22.1% 감소했을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삼성전자 한 기업의 GDP 대비 매출비율은 13.83%이며, 이 수치가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특정 기업에 대한 비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특히 FnGuide의 Dataguide 프로그램으로 분석 결과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은 전체(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0%에 육박한다.

[그림 0] 국가 경제 특정 기업 의존도



자료: 연합뉴스 2015.09.30 기사

2) 위기 전이 시뮬레이션

특정 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책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급락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로 주가 하락이 전이되는 것을 분석해 놓았다. 삼성전자 초기 주가 하락률 가정(50, 60, 70, 80%)에 대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최종주가 하락률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

<표 1> 삼성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2015년 9월말 기준)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화재
삼성전자	12.47	6.24	3.51	0	0	1.09
삼성생명	0	5.46	19.34	0	0	0
삼성물산	0	0	12.24	4.73	2.61	1.37
삼성SDI	19.31	0	0	0.21	0	0
삼성전기	22.80	0	0	0	2.65	0
삼성화재	0	14.04	0	0	0	12.65

* 순환출자 구조행렬의 수치는 행에 표시된 계열사가 열에 표시된 계열사 총 주식(보통주+우선주) 보유 비율을 의미. 대각행렬 수치는 자사주 비중을 의미.

<표 2> 삼성전자의 위기 전이 시뮬레이션

삼성전자 초기 주가 하락률 가정	최종 주가 하락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50%	60.6%	44.4%	40.3%
60%	73.6%	56.7%	50.7%
70%	87.3%	70.0%	63.2%
80%	99.5%	80.5%	69.6%

삼성전자를 특정업계를 리드하는 기업, 삼성생명, 삼성물산과 같은 나머지 기업을 그 업계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표1에 나타난 것처럼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삼성전자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정 업계를 리드하는 기업과 그 하부기업과의 관계에 비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특정업계를 리드하는 기업이 100이라는 타격을 입게 되었을 때 기업 간의 복잡한 상관 관계에 따라 리드하는 기업은 100이라는 타격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나머지 기업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나. 하청업체 문제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업체 문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여 중소기업은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며, 대기업의 성장에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 거래에서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대기업에서 납품업체에 계속 원가를 내리라고 압박을 주는 것)와 기술탈취를 일삼고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중소기업은 점점 기업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 파산에까지 이른다. 특히 기술탈취의 경우 중소기업이 R&D 투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청업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종속 현상이 심화되면서 단지 대기업의 수족에 지나지 않게 만들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은 영업 이익률을 개선하기 어렵고,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여지가 있다.

1) 하청에 관한 실태 분석

- 원가 후려치기

KBS 취재파일 [‘갑’의 후려치기…파산]에서는 하청업체에 대한 원가 후려치기를

조사하였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와 롯데 협력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CR이라는 가격다운 칸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처음에 입찰할 때, 1년, 2년, 3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가격을 낮추는 양을 제출해야 한다.”

“이 단가를 가지고 들어와 봐라 샘플을. 그리고 이 단가가 안 되면 납품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공표를 해요..... 원가는 원가대로 맞춰서 가고, 장려비와 행사비 품목도 맞춰서 가야하고.....”

이러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협력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계 1·2위로 알려진 기업 삼○전자, 현○자동차의 협력업체 매출액, 모회사와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 1] 삼○전자 현○자동차 & 협력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삼○전자와 현○자동차의 협력업체 매출액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전자의 경우 약 4배 성장했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약 1.1배 성장했다. 반면에 삼○전자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999년 약 10%에서 2013년 약 -15%로 곤두박질 쳤으며, 현○자동차 협력업체의 경우 1999년 약 4%에서 2013년 약 1%로 곤두박질쳤다. 영업이익률을 모회사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1999년 삼성전자(모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7.2%에서 2013년 삼성전자(모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4%이고, 1999년 현대자동차(모회사)의 영업이익률은 6%에서 2013년 현대자동차(모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0%가 된다. 점차 ‘갑’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업이익률의 상승률 차이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발전에 저해를 야기하며, 국가 경제 발전은 오직 대기업의 전유물이 된다.

－ 기술탈취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0.2%로 조사되었다.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빈도를 살펴보면 ‘1회’ 유출이 75.5%로 가장 많았고, ‘2회’는 9%, ‘3회’는 9.7%, ‘4회’ 이상은 5.8%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은 1.5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2016.9.8)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중소기업청·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조사한 기술유출 유형은 대략 8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현직 임직원 영입을 통한 기술 탈취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그리고 조용히 빼 오는 것으로 IT 분야에서 횡행한다.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제재 수위가 낮다는 문제점과 소송으로 갈 경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 경쟁력 약화의 문제

사업별 경쟁력 약화는 비단 기업 경쟁력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The decline and fall of nokia]의 저자 데이비드 코드는 단절적 혁신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특정산업을 리드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상품

을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경제학자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발생하는 이유와 비슷한 논리로 설명된다. 단절적 혁신이 발생하면 독점기업들은 잠재적 진입 기업들보다 기존시장에서의 이윤을 더 많이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적 진입 기업들은 독점기업보다 단절적 혁신에서 오는 기대수익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잠재적 진입기업들이 독점 기업보다 R&D 투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점기업들은 단절적 혁신보다 단계적 혁신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에서는 PC 혁명이 IBM이 아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주도되었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된 인텔도 기존 페어차일드에서 퇴사한 사람들이 시작한 신생 기업이다. HDTV로의 전환도 소니가 아닌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인터넷 검색 혁명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구글이라는 신생기업의 혁신에 의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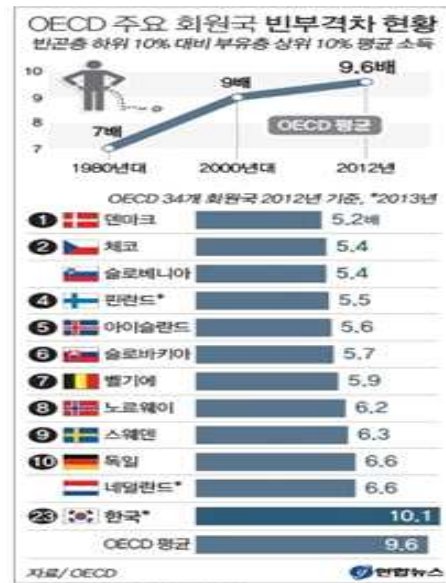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히 이렇다 할 단절적 혁신의 사례가 없다. 서울경제 신문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4.3%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가별 최고기술 보유(10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에서는 미국은 97개, EU는 13개, 일본은 9개, 중국 1개, 우리나라는 전혀 없다.

2. 윤리적 문제

가. 빈부 격차 심화

대기업 중심의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문제는 빈부 격차 심화에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계층 간 빈부 격차와 산업간 지역 간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발전과 빈부 격차 간의 인과 관계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빈부 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현실 처해 있다. [그림 4]을 보면 2015년 23개의 OECD 국가 중 빈곤층 하위 10% 대비 부유층 상위 10% 상위 소득 1위(10.1%)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OECD 주요 회원국 빈부격차 현황



문가원 안한기자 / 20150522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kuneey.kr/LetYN1

자료: 연합뉴스 2015.05.22 기사

또 다른 현황으로써, 미국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자. 구글은 5천만 달러(약 600억원)에 안드로이드를 인수하였고, 그때 당시 안드로이드 창업주 앤디 루빈은 2004년 삼성전자를 찾아와 인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상,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안드로이드를 많은 돈으로 인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인수를 거절하였다. 결국, 구글에 인수된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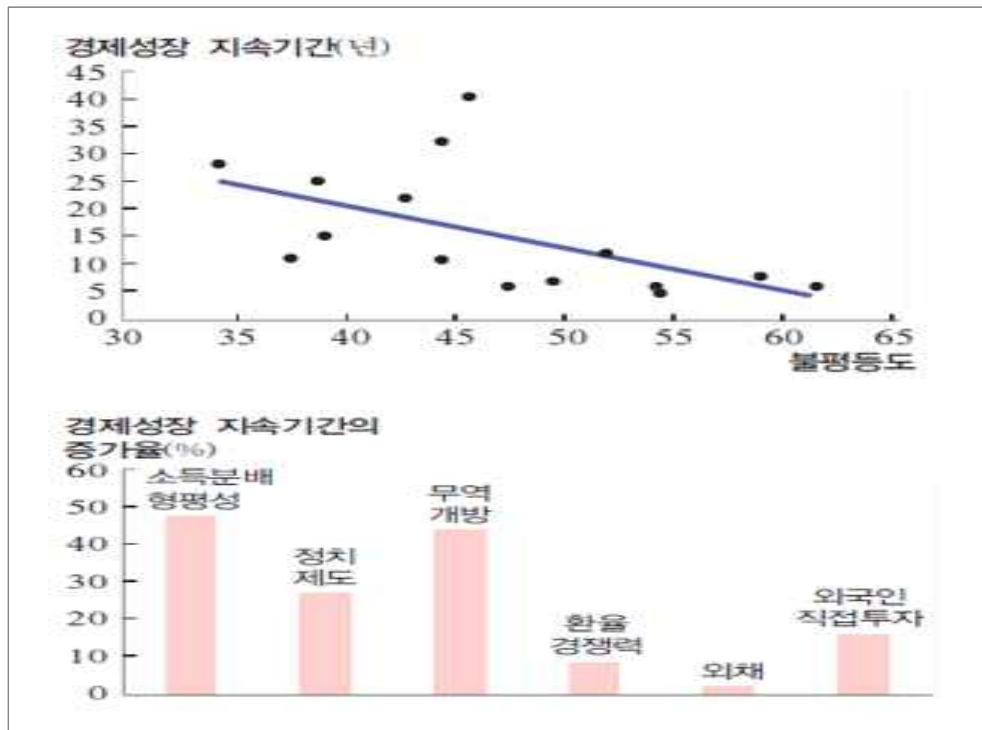
다른 예로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인스타그램이 창업되었다면, 직원 수 20~30명에 불과한 인스타그램이 구글에 1조 원에 인수된 것처럼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창업에 대한 지원들이 있지만, 이러한 기업 풍토로 인해, 중소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현재 대학생 사이에서 창업이 단지 대기업취업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2015년 전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의 차이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나라가 소수의 취업생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인력 집중현상이 일어나지만, 그곳의 우수한 인력이 사회로 나와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빈부 격차를 더 심화할 것은 자명할

것이다.

그리고 빈부 격차의 문제점은 윤리적 측면만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빈부 격차는 인적자본 축적도 낮아지게 한다. (정운찬·김영식 2012)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빈부 격차로 인한 저소득층의 신용제약이 실물자본 투자와 교육투자를 실행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정치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여 범죄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경제 성장의 정량적 데이터는 다음의 그림에서 나타난다.

[그림 5] 경제 성장과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주 : 각 요인이 10%p 상승(50% → 60% 할 때 경제성장 지속기간 증가율(%))

자료 : Penn World Tables and Wider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 Berg, A. and J. D. Ostry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11/08, 2001.

[그림 5]에서 보듯이, 소득 불평등도와 경제 성장 지속기간에는 음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며,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요소로써 예측 가능한 각국의 1인당 소득과 성장률 사이에는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²⁾) 결국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의 발전 시스템이 빈부격차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가져오고 그 빈부 격차는 ‘경제 성장률의 부진’을 만든다.

나. 복지 문제

복지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임금 협상력을 높여 준다. 그와 동시에 근로 동기를 저해시킨다. 그래서 기업들의 경우 국가의 복지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다양하며, 복지에 대한 차별화된 선호를 일으키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규모이다(Mares 2001 : Estevez-Ave, Iversen and Soskice 2001 : Manow 2001 : Swenson 2002). 대기업의 경우, 복지비 지출을 통해 숙련 노동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업복지에 한해서이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즉, 대기업의 성장은 복지 국가의 태동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조세기반의 복지 문화가 아닌 기업 복지, 사회 보험 발전에 부합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공공복지가 상대적으로 발달한다. 왜냐하면, 복지비용 부담이 외부화되길 원하면서도 사회복지가 가져다주는 혜택에서 배제되기를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다.(Yang 2011, 112-124) 따라서 동일한 산업화 수준에서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복지 국가의 발전 정도는 낮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저발전에 관한 실증 연구(양재진, 정의룡, 12. 2012)에 따르면 복지 국가 발전 정도(SSOC)를 GDP, 민주화, 노조, 대기업 집중도 등에 대해 OLS regression으로 추정했을 때, 복지비용에 대해 유의한 것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그 나라의 ‘대기업 집중도’가 2번째로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 집중도는 공공복지에 악영향을 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국가 복지에 위험이 될 수 있다.

2) Jones, C., introduction to economic growth, 1998, 에서 부유한 국가들의 소득수준과 소득성장률, 1인당 소득수준과 1인당 소득성장률을 조사하여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3. 국가적 문제

가. 인수와 핵심인력 유출

우리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기업 인수보다, 오히려 핵심인력 흡수에 집중하는 사례들을 보았다. 그에 따른 국가 경제의 저발전과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핵심인력을 빼돌려 고용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좋지만, 대기업에서 어떠한 이유로 핵심인력을 인수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연구하였다. 본 분석은 게임 이론을 근거로 추정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핵심인력을 인수할 것인지, 기업인수(M&A)를 할 것인지를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조건>

[중소기업 입장] (가치 = 비용)

– R&D 투자 전

중소기업 현재가치 : $A1 (>A2, A3, A4, A5)$

중소기업 핵심인력 현재비용(가치) : $A2^3)$

– R&D 투자 후

R&D 수익 : $A3 (>A4)^4)$

R&D 비용 : $A4$

중소기업 핵심인력 비용(가치) : $A5 (>A2)^5)$

3) 중소기업이 핵심인력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즉 임금지불액으로 산정함

4) R&D 수익이 비용이 수익보다 항상 큰 가치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나, R&D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순이익(net)이 양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R&D 수익 > R&D 비용이라 가정.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R&D 수익보다 R&D 비용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R&D수익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이 연구결과의 입장이 옳다고 보기 어려움

5) R&D 투자 후의 핵심인력 비용(가치)은 연구한 만큼 그 비용(가치)이 상승했을 것이라 가정

[대기업 입장]

- R&D 투자 전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비용 : B1 (=A1)⁶⁾

중소기업을 인수 후 기대이익 : B2 (>B1)⁷⁾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인수비용 : B3 (>A2)⁸⁾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뺀 후 기대이익 : B4 (>B3)⁹⁾

- R&D 투자 후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비용 : B5 = A1 + A3 - A4¹⁰⁾

중소기업을 인수 후 기대이익 : B6 (>B5)¹¹⁾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인수비용 : B7 (>A5)¹²⁾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뺀 후 기대이익 : B8 (>B7)¹³⁾

<결과>

<표 3> 중소기업 측면

구 분		대기업	
		핵심인력 인수	기업인수
중소기업	R&D 미투자	+ A4(R&D 비용을 쓰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득) - A3(R&D 후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한 손실) - A2(핵심인력 가치)	+ A4(R&D 비용을 쓰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득) - A3(R&D 후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한 손실) + A1(중소기업 인수대가)
	R&D 투자	- A4(R&D 비용) + A3(R&D 수익) - A2(핵심인력 가치)	- A4(R&D 비용) + A3(R&D 수익) - A1(중소기업 인수대가)

6) R&D 투자 전 중소기업의 가치만큼을 지불하고, 중소기업을 인수할 것이라 가정

7) 중소기업 인수 후 기대이익 중소기업 인수비용보다 항상 큰 가치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나, 중소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순 이익(net)이 양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인수 후 기대이익 > 중소기업 인수비용이 될 것이라 가정

8) 대기업이 핵심인력을 인수하는 비용(임금지불액)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비용(임금지불액)보다 클 것임

9) 3), 6) 주식과 동일한 원리

10) R&D 투자 후의 중소기업 인수비용 = R&D 투자 전 중소기업 현재가치(A1) + R&D 수익(A3) - R&D 비용(A4)

11) 3), 6), 8) 주식과 동일한 원리

12) 7) 주식과 동일한 원리

13) 3), 6), 8), 10) 주식과 동일한 원리

<표 4> 대기업 측면

구 분		대기업	
		핵심인력 인수	기업인수
중소기업	R&D 미투자	$B4(\text{핵심인력 인수 후 기대이익}) - B3(\text{핵심인력 인수비용})$	$B2(\text{중소기업 인수 후 기대이익}) - B1(\text{중소기업 인수비용})$
	R&D 투자	$B8(\text{핵심인력 인수 후 기대이익}) - B7(\text{핵심인력 인수비용})$	$B6(\text{중소기업 인수 후 기대이익}) - B5(\text{중소기업 인수비용})$

<표 5> 중소기업 + 대기업(행렬 합)

구 분		대기업	
		핵심인력 인수	기업인수
중소기업	R&D 미투자	$(A4 - A3 - A2) + (B4 - B3)$	$(A4 - A3 + A1) + (B2 - B1)$
	R&D 투자	$(-A4 + A3 - A2) + (B8 - B7)$	$(-A4 + A3 - A1) + (B6 - B5)$

앞서 설명한 조건(중소기업/대기업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득 추정)을 가지고, 중소기업(표3)과 대기업(표5)은 각각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 분석¹⁴⁾을 시행하였다.

첫째, 각 시행에서 A1 ~ A5, B1 ~ B8까지의 미지수(Uniform distribution)에 대해 조건에 맞는 값으로 할당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측면> 표3에서 R&D 투자 혹은 R&D 미투자를 선택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셋째, <대기업 측면> 표4에서 마찬가지로 핵심인력 인수 혹은 기업 인수에 대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넷째, 표5에서는 모든 4가지 선택지에서 나타날 경우의 수를 구하고 백분율로 나타내었다.¹⁵⁾

둘째 시행과 셋째 시행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R&D 투자를 100% 선택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핵심인력 인수를 68.3% 선택하는 결과가 도출

14) 각 기업들의 <조건> 외에는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Uniform하게 각 기업의 선택을 시행한(천만 번) 결과를 축적하여 백분율로 도출

15) 이 과정은 4가지 선택지중 중소기업 과 대기업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 값을 유추하게 한다.

되었다.¹⁶⁾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선택할 것이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인수가 아닌 핵심인력을 인수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넷째 시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선택하고, 대기업은 기업인수를 선택하는 부분이 '최대의 가치(효용)가 도출될 확률' 84.7%로 가장 높았다. 즉,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선택, 대기업은 기업인수를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이 되지만 대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중소기업 인수가 아닌 핵심인력을 인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정신으로 벤처회사를 만들거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순환고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전체 이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돕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어쩔 수 없이 핵심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를 더욱 크게 벌여 트리는 요인을 제공한다. 즉,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나. 산업의 단순화 및 국가 피해

정부는 197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유망산업을 선택하고 이를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를 이끌 기업가로 1960년대 수출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가, 혹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선호 인물들을 선정함으로써, 부의 집중, 재벌의 형성과 문제점 그리고 수출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다양하지 못한 수출품에 국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년 11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5년 13대 수출품목(수출이 많은 순)은 선박, 무선통신기기(핸드폰·부품), 일반기계, 철강제품, 반도체 등이 있다. 이러한 수출 품목들은 대부분 대기업 제조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기업이라는 소수가 수출을 담당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존하는 산업직이 단순화되었다. 이로 인해 제조업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요소들의 가격 변동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두 산업의 우리나라 수출량에 많은 영향을

16) 이 확률들은 최소한의 조건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만약 'R&D 수익이 비용의 80% 이상'이라는 조금 더 강한 조건을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면 73.7%의 확률로 대기업은 핵심인력 인수를 선택하게 된다. 위의 상황(A1~A5, B1~B8)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치 ± 1 표준편차 만큼으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대기업이 핵심인력을 인수하는 선택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끼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의 저조한 수출은 바로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추가로, 2015년 10월 수출입동향(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에 의하면, 무선통신기기 외의 모든 수출품이 감소하였다(석유화학, 석유제품, 선박에서 62억 달러(12%p) 감소) 산업통상자원부가 생각한 주된 이유로 저유가 및 시설보수, 선박의 단가 하락, 수출국의 수요감소 등이 있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문제는, 특정 대기업 CEO들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수출에 타격을 주어, 국가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앞서 요즘 수출이 부진하다는 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벌써 ‘대기업 중심의 수출은 우리나라에 큰 위험성을 현재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암시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특정 기업 위험성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이 분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든 챔피언’을 찾을 필요가 있다¹⁷⁾. 독일 중소기업의 강점과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기초 경제학 이론(따라잡기 효과, 게임이론 등)에 입각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대기업에 편중된 점과 국가 경제가 소수의 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 발전에 큰 위험성을 주는 것이다.

IV 해결방안

KDI 경제정보센터에 실린 글에서 따라잡기 효과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있다. ‘경제개발의 초기 상태에서는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해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가 쉽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져 자국보다 앞선 나라와의 격차를 좁히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라 한다’

OECD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에 기반을 둔 추격 전략(catch-up strategy)¹⁸⁾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선진 경제

17) 독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규모가 전체 수출 규모의 30%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독일의 한 전문가가 중소기업들을 칭하는 단어로 히든 챔피언이라는 사용하였다.

18) 경제학 의미에서는 단순한 GDP 대비 투자율을 의미하지만, 이 전략은 선진국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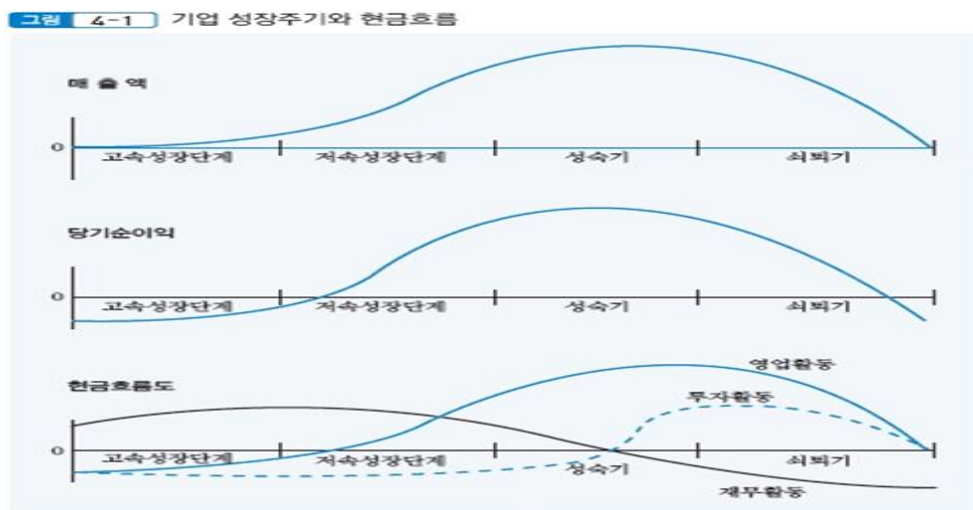
국가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에 집중하고 해외로부터의 기술 수입에 의존하였던 기존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는 Catch-up effect 전략의 다른 측면을 보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말하자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로 따라잡기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둔화되어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따라잡기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전략적인 의미에서의 Catch-up strategy와 유사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멘큐 경제학에 따르면 따라잡기 효과로 인해, GDP 대비 투자율이 같은 상황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각 국가의 경제 규모 때문인데, 이것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의 투자가 높은 성장률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조금 다른 원리로,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의 성장주기와 투자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가 중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기업 성장 주기와 현금흐름



자료: 재무제표분석과 가치평가, 2016, 백복현의 2명, 그림 4-1

[그림 7]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의 설립 및 고속 성장 단계이다. 스타트업이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는 애플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이 단계에서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대량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재무 활동 부분에

서 대량의 현금 유입이 나타난다. 그러나 기업의 꾸준한 투자와 성장이 두 번째 단계에 왔을 때에는 성장 속도가 조금 느려지지만,¹⁹⁾ 매출액에 대한 많은 증가가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이전 국가가 추진한 ‘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에 기반을 둔 추격 전략’과는 다른, 기초 경제학적인 기업 성장주기이다.

따라서 만약 이에 해당하는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적은 숫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나 지원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발달하게 된다면, 많은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현재 저 발전 중인 우리나라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즉,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경제력 활성화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중산층의 재정 및 소비 진작으로 내수 위축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가지는 현재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해결방안들을 현시점에서 분석, 미래의 관점에서 예측하고,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들을 개선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1.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개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눈여겨볼 요소는 기업 간의 협력 관계이다. 본래 협력이란 뜻을 힘을 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힘을 분산시키는 행태로 협력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었다. 앞서 하청에 관한 실태 분석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갑에 의해 협력업체들은 을이 되며, 비용 부분의 경제적 부담은 협력업체가 진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와 종속관계 심화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렵게 하며,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뿌리 깊은 수직구조 하에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종속관계에 대한 사고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한다. 엄격한 유교식 문화로부터 기인한 수직관계는 현세대들에게는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업을 취약파락하는 임원들의 사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회사의 크기가 커질수록 황제가 되려하는 이른바 제국건설(empire building)²⁰⁾을 하게 된다. 대기업의 제국건설은 중소기업들에 을이

19) 속도가 다소 느려지지만, 대기업 같은 성숙기의 단계에서 보다 상당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 회계, 재무 전문용어로서 더 큰 기업을 경영하고 싶은 유인에서 부터, 투자 가치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이다.

되게 하는 요인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는 위로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아래로는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를 조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고방식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업무 동반자로 보지 않고, ‘갑’을 위해 희생하는 ‘을’로 보게 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힘을 합하여 업무 수행하기 보다는 따로 따로 힘을 쓰는, 다시 말하면 협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국가적인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협력업체의 자생력 강화, 대형화, 전문화를 촉진하였다. 예를 들어 도요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했다.(하규수 외 8명 2010)

첫째, 모기업과 하청기업간 분업적 협력관계를 통한 경쟁력 확보.

둘째, 1960년대 중반부터 외주확대 및 외주전략을 강화하며, 하청계열 부품 메이커를 통합, 재편하여 규모의 확대를 한층 가속화 함.

셋째, 성과공유(benefit sharing)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0%의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품 질 및 비용절감에 관한 공급사의 제안을 전담하는 기관을 보유하였다.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가지 방식의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텔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했다. (하규수 외 8명 2010)

첫째, 인텔은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거래를 하면 계약을 왜곡시킬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거래는 하지 않고, Intel Capital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거래를 함.

둘째, 글로벌 정보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Intel Capital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셋째, 일 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월마다 방문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여 도와줄 부분을 찾고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며, 동반자로서의 역할 수행.

일본과 미국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식은 미국의 방식이다. 미국의 방식은 시장 경제의 원리

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했으며, 행동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원가에 대한 조치를 한 후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실무진들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아래는 대안의 한 예이다.

첫째, 협력업체가 납품원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철저한 회계감사로 납품원가 정보를 자세히 분석한다.

둘째, 서로를 경제 동반자 기업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 선진국에서의 성공사례를 도입하여(위의 인텔과 비슷한 사례 도입)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한다.

이는 하나의 예로서 정책 실무진들이 선택적으로 선별하도록 중요한 사실만을 기재하였다.

2.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충남발전 연구원의 중소기업 지원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원 부문 중 자금 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 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원법 제도 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 다각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고 말한다.(이재현 외 1명, 2009) 또한 중소기업지원체계는 중앙부처에서 관계기관을 거쳐 간 것이 60.7%(827건)으로 가장 많고,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를 거치거나 지자체에서 관계기관을 거친 것은 도합 22.1%(301건)이라고 한다.(이재현 외 1명, 2009)

[그림 8] 중소기업지원체계 유형화



자료 :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2009) 그림5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들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효율적 지원, 그리고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이 있겠지만, 해결책을 글로 풀어쓰기는 쉽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꽤 힘이 든 일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서 중앙부처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선진국 반열에 속한 유럽과 일본은 지자체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연합의 탄생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전환되면서 국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고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를 국제적으로 보호,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유럽 지방자치 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이었다.(council of Europe, 1988; 김순은, 2000c) 또한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에 들어 지방분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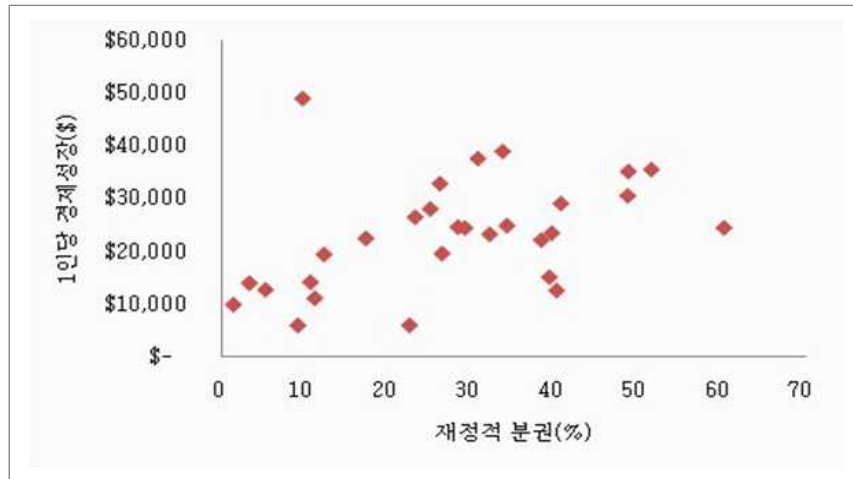
각 지자체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중앙부처에 과도한 업무가 할당되는 것을 막아서 앞서 설명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에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²¹⁾ 지자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지자체는 중소기업을 자세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발전은 해당 지자체의 내수를 복돋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내수를 복돋고,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아래의 그래프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기준에 따라 고위 경제(Advanced Economies)로 분류된 29개 국가의 자료 재정적 분권에 따른 1인당 경제성장(%)을 나타내며, 재정적 분권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경제성장(%)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정 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에 관한 논문(주운현 외 1명, 2011)은 기존 연구의 한계²²⁾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pooled GLS, GLS, FGLS 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 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직접적인 영향은 양의 상관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발전 때문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자체 내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Lessmann(2009), Sepulveda and Martinez-Vazquez(2010))

22) 일부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김현아, 2007; 임성일, 2008; 최병호·정종필, 2008) 등의 연구, 또 다른 연구들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이용모, 2004; 최병호·정종필, 2001)

[그림 9] 지방 분권과 경제 성장



자료: 지방분권의 경제효과 분석 : 국가간 비교(2010) 그림4

이 점에 착안하여, 재정적 분권을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라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정적 분권화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앞의 [그림 8]에서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에 직접(69.8%)지원을 하며, 지방분권이라는 정책 기조가 점차 시들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²³⁾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제한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확립

가. 변화된 시장, 그대로인 산업 구조

21세기를 들어서고부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시장에서 점차 싼 품목보다 고품질 품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싼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최근 생산원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선진국보다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일지라도 다

23) [그림 8]에 나타나 있듯이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69.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해당되며, 특히 이제껏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대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그 문제들은 고스란히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하청업체의 구조 문제점뿐 아니라, 이러한 경제 체제에는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아웃소싱을 증가시키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악화되었다.

다음은 21세기 국가 간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다.²⁴⁾

<표 6> 대표 나라별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2001~2007)

기업규모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소기업	4.5	7.8	8.9	7.6
중기업 ²⁵⁾	4.7	7.2	8.4	7.7
대기업	7.3	9.7	8.7	5.8

주: 독일은 2001~2004년, 미국은 2001년~2005년, 프랑스와 한국은 2001~2007년 간 각 년도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평균한 수치.

자료: EU-Commission, Bach Database,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경영지표 추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컸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차이가 작을뿐더러 독일의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큰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소기업 간의 계열화 구도를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앞서 언급한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수직화된(혹은 계열화된) 구조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중소기업이 중점적으로 받은 결과로 보인다.(김강식, 정남기 2012)

나. 변화

이러한 변화적 추세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업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21세기 초에 쟁점이 되었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다. 구조적, 비용적 문제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효율적으로 실현하지 못했었는데, 이 방식을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4) 2006년 이후 EU commission에서 각국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을 조사하지 않았으나(프랑스 제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년 -0.5% ~ 0.5% 상승의 자료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폭 변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 각 나라마다의 중소기업 고유 기준을 사용하였다.

‘다품종 소량 생산 기업의 효율적인 설비배치 모형에 관한 실증적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측면에서 시스템효율을 높여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문제점(제조 비용 및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근본적인 구조 변경 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가졌다.(윤재곤, 1994)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선진화된 기업구조를 가진 나라들을 연구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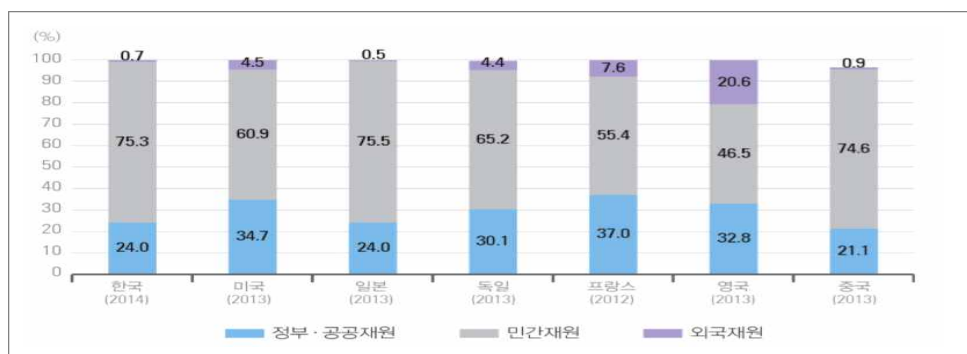
또한, 기업적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과 창의에 입각한 경영, 중소기업 규모가 최적규모인 가장 적절한 사업분야로 진출, 그리고 자주성 독자성을 갖추어 독자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적인 경영, 경쟁을 피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의 품질·성능 및 디자인 등을 차별화하는 이질적 경쟁, 환경 변화는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아울러 위협을 주는 것이므로 기업성장의 전략적 기회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대응 등에서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박주영, 이상호, 박경원, 2009)

4. R&D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의 투자

가. R&D 적절한 방식의 필요성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총 연구 개발비는 63조 7341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작년보다 0.14%p 상승한 4.29%로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에 의하여 충당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24.3%로, 주요국보다 민간의 부담이 크고 정부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그림 10] 각 나라별 재원 충당 비율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5-1²⁶⁾

연구 개발비의 사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49조 8,535억 원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76.6%), 일본(76.1%), 미국(70.6%)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업 연구 개발비 중 74.53%가 제업(산업 생산 및 기술) 분야에 가장 높게 투자되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건강 분야에(4.45%) 투자되고 있다. 정부에서 대기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810,358 (단위 백만 원, 정부 재원에서 출연기관, 국공립 대학 제외) 중소기업에는 1,256,701 (대기업 투자비용과 같은 기준)을 투자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유발계수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²⁷⁾

<표 7> 2008-2010년 중소기업 R&D 지원금액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고용유발
중소기업 R&D 지원금 (4,426.8 십억원)	연구개발 부문 수요증가	7,171.4	3,523.7	61,532.5	52,678.9
	민간투자 증가	9,460.1	3262.2	62,993.4	45,919.2
	연구개발 부문 생산(외생화)	2,740.2	960.6	21,363.7	13,005.9
(표본자료) 중소기업 R&D 지원금 (3,678.8 십억원)	연구개발 부문 수요 증가	5,959.7	2,928.4	51,135	43,778
	민간투자 증가	7,861.7	2,711.3	52,349	38,160
	연구개발 부문 생산 증가(외생화)	2,277.2	798.3	17,754	10,808
(폐널자료) 중소기업 R&D 지원금 (1,259.1 십억원)	연구개발 부문 수요 증가	2,039.8	1,002.3	17,501.7	14,983.4
	민간투자 증가	2,690.7	928.0	17,917.2	13,060.3
	연구개발 부문생산 증가(외생화)	779.4	273.2	6,076.5	3,699.3

26) 독일과 중국의 비중합계는 100%가 되지 않음.

27)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하였다.

위의 표의 분석을 근거로, R&D 투자가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등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 따른 R&D 지원금으로 분석해 보자면, 매출액이 높은 기업에만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⁸⁾

추가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참여는 해당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과제 참여로 인해 매출액 성장(연평균 5.55%p), 순이익 성장(연평균 4.75%p)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문상 연구원 외 3명, 2016)

요약하자면, 연구개발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그 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참여율은 높지 않다. 또한,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분야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 비율²⁹⁾이 훨씬 높은 것을 고려 할 때, 중소기업 한 기업당 받을 수 있는 R&D 지원은 높지 않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업이 적을지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 참여는 해당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인 분석한 결과([표7]) 이 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점을 경험적 혹은 분석적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경제적인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

한국 무역협회 국제 무역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 및 수혜기업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비중을 14년 16.8%에서 올해 18%까지 확대를 기획하고 있으나, 강소기업의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이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인재 POOL의 제약, 자본과 기술력의 열세, 우수 인력에 대한 유인 체계 부재, 확보된 기술 인력의 유동성 등을 들 수 있다. (조용현, 2006) 그러나 R&D 지원 정책에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되지 않았고 정부의 연구 개발활동 지원은 투자형 자금이 적은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중적이고 단편적인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 과정에서 직면하

28)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으로 기업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기업의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 및 총 요소 생산성 지표를 구축하고 동적 패널 분석 기법으로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가 과거 대비 현재 매출액(R&D의 장기적인 성과)과 국내, 국외 국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착안하여 신뢰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다.

29)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 비율은 99%이다.

고 있는 기술 자금, 인력 및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장애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문상, 2016)

추가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R&D 기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원영, 2009) R&D 지원이 개량/보완 기술 위주라는 비판도 있으며 R&D 사업화를 위해서는 통상 R&D 개발비용의 10배 이상 자금이 필요하다.³⁰⁾

이러한 문제들이 중소기업들에 사업을 위한 지원보다는 자금지원을 목표로 한다. 즉, 애초부터 개발에 초점을 설정하거나 박사 연구원을 이름만 고용·기재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채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여러 모색 방안

우리나라는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중소기업과 창업에 관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초기 정책이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본 대안들은 앞서 언급한 연구한계에 따라, 중요한 부분만을 언급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선택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길 본 연구에서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는 있으나, 설비 비용 문제에 직면한 창업자들이 많이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그들에게 창업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조금 더 알맞은 제반 지원까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³¹⁾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획기적인 ‘드론’을 개발할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주에게는 경영경험과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설비 등이 필요하다. 그에게 같이 작업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같이 성장해가는 상부상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로 인한 기업 발전과 국가의 R&D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이디어 창업주의 경우 중소기업의 이윤을 같이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의 부족한 경영이나 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 좋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문제점 연구에서와같이 소량적이고 단기적인 R&D 지원 사업은

30)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 및 창업 성장기술 개발 산업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하다.

31)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에, 법적 멘토링, 경영 멘토링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으로서 중소기업과의 연결·아이디어 사용 방법등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 R&D 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단기적인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주기에 맞춰 제대로 된 신기술 산업평가와 기획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선행된 연구에서 매출과 정부연구의 규모가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규모의 자금을 적정 기간 동안 역량 있는 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하는 위험을 정부, 중소기업 경영자, 외부투자자, 대기업 등의 협력업체들이 분담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강문상, 2016)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중소기업의 경영사례나 연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연구 개발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R&D 지원 중, 성공적인 경영 사례를 주고받거나 주의 깊은 조사를 하며 중소기업들 간의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적인 인프라 모임들은 서로의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5.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순간적인 유동성 부족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는 위험이 되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한다. 최근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환 변동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많은 기업은 통화옵션이나 선물환 계약으로 많게는 수백억에서 적게는 수억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피해라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손실을 견딜만한 기초체력이 부족하다. 같은 충격이라도 대기업은 견딜 체력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은 체력이 낮아서 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자금에 따른 문제를 외부에서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의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기업대출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2006년 88%에서 2014년 74%로 해마다 비율이 낮아졌다.

<표 8> 유형별 대출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12	2013.12	2014.12
대기업	40 (12)	55 (13)	89 (17)	88 (17)	100 (18)	131 (22)	158 (26)	167 (26)	183 (26)
중소 기업	302 (88)	370 (87)	422 (83)	443 (83)	441 (82)	455 (78)	460 (74)	487 (74)	522 (74)
가계 대출	341 (49)	358 (45)	383 (42)	404 (42)	427 (43)	451 (42)	463 (42)	478 (41)	517 (41)
기업 대출	341 (49)	425 (53)	511 (56)	531 (56)	541 (55)	585 (55)	618 (56)	654 (56)	706 (56)
공공 자금	13 (2)	17 (2)	22 (2)	22 (2)	22 (2)	31 (3)	24 (2)	29 (3)	32 (3)
원화 대출금	695	800	916	957	990	1067	1105	1161	1255

주 : 1. 원화대출금 기준(은행간 대여금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독일은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약 30%에 달하는 중소기업 강국인데, 독일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금융지원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도 은행 위주의 금융시스템, 담보대출 관행, 낮은 직접금융 비중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다. 하지만 장기자금의 공급, 지역 금융의 역할,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래는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소개한 표이다.

<표 9>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공통점 및 차이점

구분	공통점	차이점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위주의 금융시스템 담보대출관행 낮은 직접금융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자금의 공급 지역금융의 역할
중소기업 정책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을 통한 간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주요 자금지원 대상의 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독일은 2008년 3/4분기 기준 전체의 64.5%로 우리나라의 15% 미만인 수준에 비해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시설자금에 대한 수요가 40%에 달하는 점을 고려

하면 부채와 자산 간의 듀레이션을 매칭 하는데 꽤 어려운 일이 된다. (정남기, 2009)
또한 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독일은 38.67%로 우리나라의 16.62%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독일이 어떠한 차이로 중소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금융시스템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중소기업에게 자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자금의 대출 기간과 자금의 필요기간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공공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민간은행들도 공공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비율을 높일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역 금융기관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하여,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가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여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³²⁾

V 결 론

성경 중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디모데전서 4장 4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관점을 달리하면, 유익하고 좋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통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겪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대기업의 성장 발전이 우리나라에 주는 경제적 이익을 약 20년 동안 경험했고, 그로 인해 대기업 중심의 나

32) 정남기(2008)의 자료에 따르면 정책목표에 따라 정부가 손실에 대한 위험을 100% 부담하여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게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은행에게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독촉하고 있다.

라가 경제 성장의 주축이라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혹자는 ‘삼○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망한다.’ ‘현○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면서 중소기업은 단순히 대기업을 돕기 위한 하청업체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과로서 나타난 저성장의 문제에 갇힌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즉, 이제껏 잘못 바라보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보자. 중소기업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오히려, 대기업 중심의 문제가 윤리적 문제(빈부 격차, 복지제도 저하), 경제적 문제(줄도산 리스크, 하청업체 문제, 기존 기업의 경쟁력 약화문제, 빈부 격차에 대한 경제적 문제), 국가적 문제(핵심인력&인수 문제, 산업의 단순화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일으켰다. 본 연구 자료와 분석에 근거하면, 중소기업의 발전이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수출증대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료가 시행되기까지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중요한 핵심을 다루었다.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재분배로 바라보는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효율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인용구에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중소기업에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헬조선’이 아닌 ‘혜븐 조선’을 우리의 아들·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 자료>

- 강문상 연구원 외 3명, 『중소기업R&D투자 효율성에 관한 실증 연구』, 2016.
- 강문상 외 3명, 『중소기업 연구 개발 투자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 김강식·정남기, “한·독 중소기업 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12.
- 김승일·정남기·한덕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한 분석”, 2010.
-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나라경제 2012년 2월호 [특집] “다수 강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KDI , 2012년.
- 김순은,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 김용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 KISTEP, 2012.
- 김철환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따라잡기 효과”, KDI 경제정보센터 발행호 2010년 09월호.
- 김현아, “재정분권과 지역소득. 개정논집”, 21(2):1-21
- 도계훈·홍길표, 『중소기업 R&D 역력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KISTEP, 2010.11.
- 류기현, “정보부조금, 기업성향, 제품수명주기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R&D행태 연구”, KAIST, 2008
- 매일경제신문 기사 ‘기술·인력 빼앗기고도’ 병어리 냉가슴 ‘中企’, 2016.9.8
- 박주영·이상호·박경원, 『중소기업경영론』, 학현사, 2009.
- 백복현·장귀화·최종학,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가(2판)』, 박영사, 2015, p. 132 ~ p. 146.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년 11월 1일).
- 서울경제신문 기사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삼성전자, 세계 500대 기업’톱 10 ‘진입 멀지 않았다’. 2015.9.12

- 양재진·정의룡, “복지국가의 저발전에 관한 실증연구”, 2012.
- 윤재근, “다품종 소량 생산 기업의 효율적인 설비배치모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 경영학회, 1994.
- 윤민경, “지방분권의 경제효과 분석 : 국가간 비교”, 2010
- 이용모, “한국의 재정분권화가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정책학회보, 13(3):89-116, 2004
- 이재현, 고승희,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9
- 임성일, “재정분권과 성장 :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수단의 모색”, 응용 경제, 2008
- 장상식·김예민,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3년.
- 장상식·김예민, 『최근 중소기업 수출 동향과 수출 확대 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3.
- 장태중·김능수·유영복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기술개발과 생산단계에 미치는 영향 실태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 정운찬·김영식, 『거시경제론 (10판)』, 율곡출판사, 2012년, 제5장&18장.
- 정재욱(담당자), 『정부 R&D 혁신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12.
- 정남기,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제도의 비교”, 2009, p. 10 ~ p. 15.
- 조용현, 『중소기업R&D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6.
- 최병호·정종필,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경제학논집, 9(1):105-126, 2000
- 최원영, “중소기업 R&D 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KAIST 경영대학원, 2009.
- 하규수 외 7명,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 분석”,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 한국은행, 14년 3월 보도자료

- KDB, “독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2.
- Yang, Jae-jin. “A Deductive Reasoning about the Diversity of Welfare State Building: An Institutional Power Resources Model”, 한국사회정책 18집 4호 113-134., 2011.

－ 신문 및 시사 영상

- “독일의 힘, 작지만 강한 ‘히든 챔피언’”, 한겨레 기사, 2012년 09월 17일자.
- ‘세계 100대 브랜드, 삼성전자 7위에’, 경향신문 기사, 2015.10.05.
- KBS 취재파일, “‘갑’의 횡포... 파산”, 2014.9.24.(방송일)

－ 인터넷

- ‘韓경제의 특정 대기업 의존도, 주요 15개국중 최고’, 연합뉴스 기사, 2015.9.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203400009.HTML> (접속일자 09월 14일)
- ‘OECD “회원국 빈부격차 사상 최대”...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연합뉴스 기사, 2015.05.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2/0200000000AKR20150522006800081.HTML> (접속일자 08.29)
- 이한영,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낙수효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87050&categoryId=58393&cid=58393>
(접속일자. 2016.09.03)
- 서울경제신문 기사 ‘R&D 투자 세계 최고라지만... 기술경쟁력은 되레 뒷걸음질’,
<http://www.sedaily.com/NewsView/1KZZHQESGE> (접속일자. 2016.9.4)

<해외 자료>

- Estévez-Abe, Margarita, 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the welfare state” Peter A. Hall and Davi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Jones, C., introduction to economic growth, 1998.
- Manow, Philip, “Welfare State Building and Coordinated Capitalism in Japan and Germany.” Wolfgang Streek and Kozo Yamamura, eds. The Origins of Nonliberal Capitalism: Germany and Japan In Comparis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 Mares, Isabela. “Firms and the welfare state: When, why, and how does social policy matter to employers?” Peter A. Hall and Davi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OECD,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4년 6월 개요.
- Sepulveda and Martinez-Vazquez, “The Consequenc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Working Paper Series, at AYSPS, GSU: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a State University, 2010.
- Swenson, Peter., Capitalist against Marke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